

北韓經濟의 開放과 改革의 展望

金 泳 鎬*

< 目 次 >

- I. 머리말
- II. 北韓經濟의 전개과정
- III. 經濟 開放政策의 展開
- IV. 經濟體制의 改革의 問題
- V. 小結

I. 머리말

冷戰이 끝난 후 북한경제는 붕괴나 현상유지나 아니면 재건이나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다. 종래의 북한경제의 소위 「自立的 民族經濟」는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한계에 이르른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開放과 改革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開放의 方向과 方法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改革의 전망은 더욱 흐리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냉전 후에 北韓은 核外交로 국제 정치적으로 再生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美國으로부터 體制安保를 보장받고 그것을 배경으로 經濟的으로도 再生의 국제 경제적 틀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羅津·先峰의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開放관계 정책이다.

그러나 開放은 필연적으로 북한 내의 사회주의 체제의 改革으로 이어지게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되고 특히 北韓型 社會主義의 근간이 되는 主體思想體系와 부딪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對外的 開放이 對內的 改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改革의 핵심은 市場經濟의 원리와 형태를 도입하는 문제이다. 中國은 「社會主義 市場經濟」란 개념으로 개방을 개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 「社會主義·自立的 民族經濟」란 애매한 표현에 머물고 있다. 開放의 시나리오에는 있어도 改革의 시나리오에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中國이나 베트남이 대외적으로 국제 정치적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고 경제적으로도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틀을 마련하여 再生의 궤도에 진입한 데 비하여 北韓은 대외적으로 국제 정치적 시스템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이면서도 대내적인 사회경제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對外的인 데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對內的인 데에 있다고 하겠다.

本稿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開放과 市場經濟와 資本主義와 市民社會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브로델은 市場經濟는 資本主義만이 아니라 어떠한 體制와도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또한 資本主義는 韓國의 開發獨裁나 日本의 軍國主義 集團主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市民社會 혹은 民主主義가 아닌 형태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韓國, 日本 등이 이제 市民社會的 資本主義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면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아직 市民社會가 성숙하지 못한 資本主義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中國, 베트남은 非資本主義的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아직 非市場經濟的 社會主義 開放經濟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먼저 北韓經濟의 기본원리와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開放과 改革의 方向과 方法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北韓經濟의 전개과정

北韓의 「自立的 民族經濟」란 「主體思想」을 經濟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故 김일성 주석의 定式化에 의하면 「나라를 富強하게 하고 人民生活을 향상시키기에 필요한 重工業 및 輕工業의 製品과 農產物을 기본적으로 國內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經濟的 多方面적으로 발전시켜 近代적 기술로

裝備하고, 자기의 強固한 原料기지를 쌓아 올리는 것에 의하여 모든 부문이 有機的으로 연결된 하나의 總合的인 經濟體系를 確立하는 것」¹⁾을 말한다.

自立的 民族經濟에 대한 金日成의 概念規定은 물론 다소 抽象的이고, 또 그러한 이상적인 발전이 자본주의 세계 시스템 속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너무 樂觀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北韓의 改定 憲法에서도(1992년 4월9일) 제19조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社會主義의 生産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依據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6조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 마련된 自立的 民族經濟는 人民의 행복한 社會主義 생활과 조국은 自主的 發展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國家는 社會主義 自立的 民族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과학화를 다그쳐 人民經濟를 고도로 주체적인 經濟로 만들어 완전한 社會主義 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鬭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기 위한 經濟管理의 原則은 무엇인가 北韓 憲法의 제32조에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을 위한 經濟 管理의 原則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國家는 社會主義 經濟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經濟技術的 지도 國家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創發成 唯一的 지휘와 民主主義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이것은 北韓의 經濟관리의 基本原則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이 규정의 특징은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지도의 결합 통일적 지도와 개별 經濟單位의 독립적 경영의 결합, 위로부터의 유일적 지도와 현장의 참여의 결합 그리고 정신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의 결합이라는 식의 二元混合原理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二元混合原理는 北韓의 經濟管理機構 自體도 二元化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經濟政策管理體系를 살펴보면 黨中央委員會 經濟部署와 政務院 經濟部署로 二元化되어 그것이 각 經濟 단위 속에 二元的으로 이어져 統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經濟管理의 원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經濟技術的 지도 혹은 정치적 사상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등의 二元構造 속에 前者가 後者를 壓倒하고 있듯이 經濟管理體系도 黨이 政務院을 壓倒하고 있다. 黨中央委員會에서 결정한 經濟政策의 기본방향을 받아 政務院의

1)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제에 관하여」(『김일성 저작집』 제3권).

관련부서에서는 細部技術의으로 추진하고 관리한다.

黨中央委에는 제1, 2, 3, 4 經濟部 財政經理部 등의 11개 經濟部署가 있으나 非經濟部署의 經濟部署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하다. 아울러 黨大會 黨中央委員會에 소속돼 政治局全員會 등을 통하여 經濟政策이 採擇되기도 하고 주요한 經濟政策目標가 제시되기도 한다.

中央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經濟管理에 있어서 黨系列과 行政系列이 二元的으로 貫徹되고 있어 二元的 構造의 순차적 連鎖現象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黨系列과 政務院 계열 혹은 정치사상적 系列과 행정기술적 系列의 二元化가 어떻게 마찰되고 종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中央과 지방의 관계 즉 中央集中의 強化와 分權化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北韓에서 經濟管理의 中央集中화와 分權化의 관계는 시기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해방 후~1959년까지의 시기에는 產業國有化와 中央管理機能의 강화로 中央集中化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1959년에서 1962년간의 시기에는 군단위의 지방기관의 권한 강화와 지방공업의 건설을 위한 現地管理強化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시 1961년 이후, 아마도 韓國의 군사정권의 등장에 대응하는 일방 產業化의 속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中央執權化가 다시 강화되었다. 그 후 1981년부터, 김일성의 표현을 빌리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공업 指導體制를 새롭게 개편하는 획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각 지방별로 소위 道經濟指導委員會가 설치되면서 지방에 經濟管理權限을 일부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가격결정의 中央統制機能을 약화시키면서 88년부터는 가격결정권한을 지방에 일부 移讓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개별 생산단위의 독립채산제의 강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經濟改革은 기본적으로 改革權限의 분권화의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北韓經濟의 對外 開放이 北韓의 體制危機로 이어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中央執權의 강화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어 오히려 사태는 복선적 양상을 띠 가능성 있다.

北韓에서는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식으로 소위 「靑山里方法」과 「大安方式」을 수립하였다. 「靑山里方法」이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靑山里에 대한 현지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후 北韓 經濟管理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黨의 지도 노선을 貫徹하면서도 현지의 실정

을 감안하여 자주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아울러 농업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政治的, 思想的 동기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에 있어서의 靑山里方式을 공업부분에 적용한 것이 이른바 大安方式 즉 「大安의 事業體系」이다. 김일성이 1961년 12월 평남의 大安 전기공장 현지도에서 제시하여 1967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北韓의 공업 관리시스템은 해방 후 몇 번의 변화를 겪었다. 해방 후 공장자치관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혹은 광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그 후 공장관리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企業長 單獨 責任制로 바뀌었고 다시 1967년 말의 大安의 사업체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大安의 事業體系는 工業企業의 대규모화와 기술혁신의 진행에 따라 관리능력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黨의 집단적 지도와 연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企業에 대한 黨의 지배강화와, 經濟的 동기보다 정치 사상적 동기의 강화, 그리고 中央集權化된 計劃的 管理 속에 現地의 책임을 강조하는 施策의 一環으로 일정한 獨立採算制의 실시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憲法 제33조에서는 大安方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國家는 생산자 대중의 集體的 힘에 의거하여 經濟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社會主義 經濟管理形態인 大安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企業的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經濟를 지도 관리한다.」여기에서 우리는 大安方式이란 생산자 대중의 集體的 힘에 의거하여 經濟를 과학적合理的으로 관리운영하는 社會主義 經濟管理形態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大安方式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朝鮮 勞動黨 黨委員會가 최고지도기관으로 집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써 經濟管理에 대한 黨의 정치적 이념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經濟技術的 지도는 黨이 아니라 國家의 行政技術部署가 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黨의 정치적 이념적 지도체제와 행정기구의 행정적 기술적 지도체제가 현지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제문제를 각종 협의를 통하여 집단주의적 방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大安方式 속에 통합된다. 이것은 北韓의 經濟管理의 틀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생산현장에서의 政策決定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大安方式은 단기적이고 단순작업인 경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產業이 고도화하고 기술

이 복잡화 정밀화하면 할수록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大安方式은 생산성의 저하와 기술의 정체를 갖고 오고, 생산성의 저하는 社會主義, 財政輸入의 감소를 갖고 오고 財政輸入의 감소는 새로운 投資의 감소를 초래하며 投資의 감소는 성장의 정체 내지 후퇴를 갖고 온다.

이와 아울러 「自立的 民族經濟」論을 對外經濟關係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종의 수입代替形産業化 體系이다. 「自立的 民族經濟에 관한 金日成 자신의 概念定立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重工業製品 輕工業製品 및 農產物을 전부 국내에서 均衡的으로 생산하여 自立經濟를 이룩하자는 것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나 기술 및 원자재 등은 해외에서 輸入해야 하고 그만큼 輸入依存率을 높이게 된다. 더구나 실상은 최근 輕工業 우선주의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간 重工業 우선의 不均衡政策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중공업건설에 필요한 관련 설비의 輸入증가로 그만큼 중공업건설을 위한 설비의 輸入依存이 커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輸入概念은 있으나 輸出概念이 약하다. 輸出概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國際分業의 原理보다 폐쇄적인 自立原理에 따른 것이므로 輸出競爭力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收益性을 기준으로 한 輸出構造와 國際分業을 기초로 한 對外經濟관계는 自立成民族經濟에 反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부정」²⁾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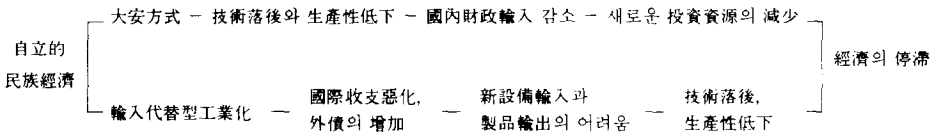
그 결과 民族的 自立經濟를 추진하면 할수록 國際收支가 악화되고 그러한 國際收支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外債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外債가 증가하면 점차 元利金辨濟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면 對外貿易關係는 파탄을 맞게 된다. 동시에 외채부담은 신설비 신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신설비,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공업화는 지체되고 생산성은 낙후된다. 아울러 중화학 공업화를 위하여는 국내에 기술적 숙련 노동력의 축적이 있어야 하는데, 숙련기술자의 축적없이 중화학설비 건설에 치중하다 보면 역시 설비의 가동율이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효율성과는 어긋나는 自立經濟가 되기 쉽다.

그리하여 自立的 民族經濟의 두 가지 측면 즉 大安方式이나 靑山里方式이

2) 姜日天, 「朝鮮社會主義 經濟建設의 現段階에 있어서 獨立採算制의 強化에 관하여」, 『月刊朝鮮資料』, 제27권 7호, 1987.

갖고 오는 經濟的 停滯過程과 輸入 대체형 對外關係가 갖고 오는 經濟的 停滯 과정이 만나게 된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北韓型 經濟的 惡循環



이러한 經濟的 惡循環은 GNP의 사실상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國防費의 증압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다시 종래의 社會主義諸國의 市場經濟化로 中國, 러시아 등이 달러 결제 무역을 요구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더구나 에너지의 부족은 생산의 모든 부분의 停滯를 갖고 오게 되었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경제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北韓型 惡循環의 귀결이라고 하겠다.

<표 1> 북한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을 추이

(단위: %)

1954-56	1957-61	1961-70	1971-75	1976-80	1981-84	1986-89	1990	1991	1992	1993
30.1	20.9	7.5	10.4	4.1	4.3	2.4	-3.7	-5.2	-7.6	-4.3

자료: 1954~89년 자료: I. Jeffrie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Market: A Guide*,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London, 1993, p. 197에서 재인용. 1990~93년도는 한국은행 평가치임.

1990년 이후의 최근의 북한 경제의 중요 지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GNP 규모에서부터 수입, 수출 무역총액 외채 에너지 공급, 농산물 공산품 생산과 거의 모든 항목이 GNP의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2〉 북한 경제의 주요지표 추이 : 1990-1993

지	표	단 위	1990	1991	1992	1993
G N P	억 US \$		231	229	211	205'
수	입	"	18.2	16.4	15.7	15.4
수	출	"	12.7	9.4	9.3	9.4
무	역 총 액	"	30.9	25.8	25.0	24.8
외	채	"	78.6	92.8	97.2	103.2
정	부 예 산	"	172.0	171.7	184.5	187.2
전	력 공 급	억kwh	277.4	263.0	247.0	221.0
원	유 수 입	만ton	252	189	152	136
곡	물 생 산	"	481.1	442.7	426.8	388.4
강	철 생 산	"	336.0	316.8	179.3	186.0
시	멘트 생 산	"	613.0	516.9	474.7	398.0
비	료 생 산	"	158.6	143.5	138.5	160.9
석	탄 생 산	"	3,315	3,100	2,920	2,710
직	물 류 생 산	억M	2.0	2.1	1.7	1.9

자료 : 1990년도는 통일원, 1991~1993년도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임. 수출입액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서울: 대한 무역진흥공사, 각년도).

Ⅲ. 經濟 開放政策의 展開

北韓經濟는 開放과 改革의 문지방에 서 있다. 물론 北韓經濟의 變身은 반드시 改革型 開放이 아니라 改革없는 일부 지역만의 부분開放이라는 이중구조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일정한 開放은 일정한 經濟 改革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이고, 또한 일정한 改革은 다시 開放을 더욱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중구조 그 자체의 변화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改革보다 開放先行形政策으로 전개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北韓經濟의 對外開放政策은 經濟史的으로 세번째의 變身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 變身은 1970년대 초기의 北韓經濟의 제1차 開放이다. 이 때 北韓은 資本主義諸國과 비교적 활발한 開放政策을 추진,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輸出入이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자리수로 증가하였으나 제1차 오일 쇼크의 와중에 실패로 끝나고 貿易적자만 끌어안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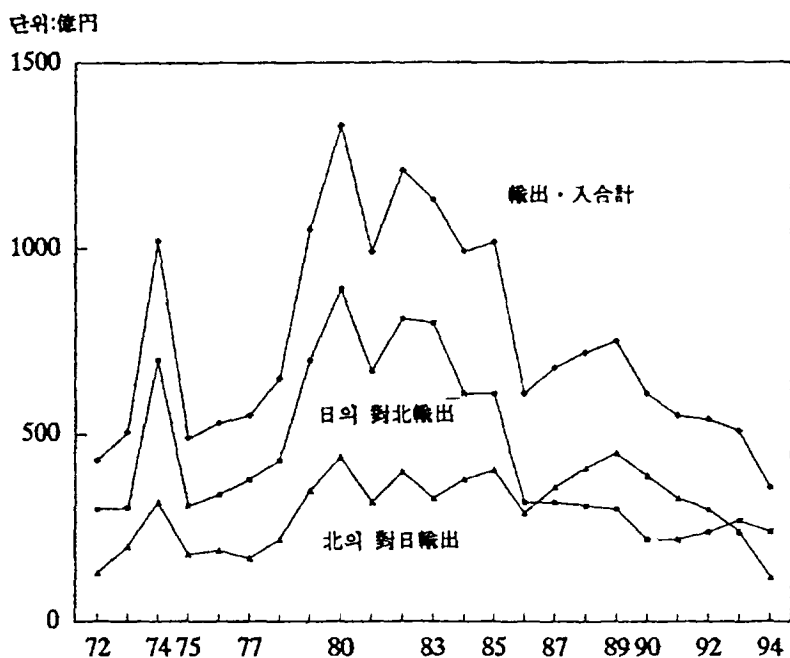
〈표 3〉 北韓의 對資本主義 貿易의 變遷

구분 \ 연도	1956	1962	1970	1974	1980	1984	1987	1990
輸 出	0.8	3.8	30.0	36.9	46.5	31.3	29.9	31.1
輸 入	0.1	3.1	13.7	53.7	41.9	39.5	28.0	25.4

자료: 韓國貿易협회, 『주요北韓經濟 지표』, 1992 기타 자료에서 작성.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對日貿易도 오히려 縮小하는 結果가 되었다.

〈그림 2〉 北·日 貿易의 推移 (1972~1994, 단위: 億 円)



資料: 日本JETRO.

註: 단 1994年은 1月 29日 까지의 合計.

北韓經濟의 두번째의 變身은 1980년대 初中葉의 對外貿易量도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貿易에서 다시 投資留置에도 노력하여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김정일은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經濟를 건

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언하였는데 北韓의 經濟改革政策 수립가들은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對外經濟開放의 확대는 「自立的 民族經濟」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主體思想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北韓經濟는 세번째의 變身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동구권의 붕괴 이후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렵게 유지해 온 北韓經濟의 위기탈출의 政策이기도 하지만, 종래의 두 차례의 變身보다 훨씬 대규모적이고 근본적이다. 그것은 특히 1992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북한의 헌법개정, 과거의 合營法에 이은 「合作法」의 制定, 外國人 企業法의 제정 그리고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제정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開放改革政策은 과거의 두 차례의 開放改革政策과 일정하게 연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내재적--혹은 연속적인 政策결정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連續性을 주목하고 그것을 살림으로써, 단절성이 물고 올 體制崩壞의 가능성과는 별도로 어느 정도 질서 있는 體制改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北韓經濟의 開放, 改革政策의 결정에 있어서 連續性과 단절성의 양면을 함께 주목하면서 北韓 體制의 질서 있는 改革의 가능성과 體制崩壞의 가능성에 함께 대응하는 다양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北韓의 自立的 民族經濟論의 틀 속에서 어떻게 開放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가. 김정일은 이미 오래전에 「自力更生の 原則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³⁾」라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와 對外開放을 兩立시키려고 하는 논리를 지적하였다. 사실 이 논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對外開放 政策 수립과정에 있어서 開放政策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尹基福 中央人民委員會 經濟政策委員長은 合營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自立的 民族經濟를 착실하게 이룩하였으므로 어떤 外國과 合作을 해도 당당하며, 또한 外國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다.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自立的 民族經濟가

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4.

4) 尹基福,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한 자주적인 합영법」, 『월간 조선자료』, 제24권 12호.

착실하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對外開放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단계론적인 접근이다. 이 논법은 최근 북한의 開放政策이나 羅津·先峰 등의 自由經濟貿易地帶를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관철되고 開放政策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또한 김정우 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委員長은 「自立的 民族經濟路線은 타국에 의한 經濟的 隸屬에는 반대하지만, 協力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⁵⁾」라고 강조하고 있다. 「自立的 民族經濟」개념을 對外 隸屬과 대립시키면서 對外協力和 順應시키는 論理이다. 여기에서 金達玄 副總理는 한 걸음 더 나아가 「特區를 만듦으로써 自立的 民族經濟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⁶⁾」라고 하여, 對外開放을 통한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政策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自立的 民族經濟」의 틀 속에서 對外開放·改革政策을 전개하려는 일련의 논리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北韓의 開放·改革政策 결정과정에 있어서 내재적 連續性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開放改革政策에는 외적 상황의 급변에 의한 政策的 단절성이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政策的 단절성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連續性을 나타내는 일련의 政策論理가 동원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종래의 自立的 民族經濟論은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선진資本主義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항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憲法과 일련의 外國人投資法에는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자본주의와의 協力和 共存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1972년 憲法의 제 16조와 제 46조에 사용되었던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있고, 따라서 투쟁대상은 「侵略」이지 先進資本主義 그 자체는 아니다.

「朝鮮民主主義共和國合作法」(1992. 10.5)과 「外國人企業法」(1992. 10.5)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外國」이라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資本主義 諸國과의 協力和 合作의 길을 법적으로 열고 있다. 아울러 資本主義關係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資本主義의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北韓經濟의 최고 책임자인 金達玄 副總理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外

5) 『羅津 先峰自由經濟貿易地帶』, 『月刊 朝鮮資料』新年特別號, pp. 24~28.

6) 同上.

7) 拙稿 「北韓의 經濟開放 改革政策의 決定過程」, 『社會科學研究』, 1993년 12월,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貿易은 종래 社會主義國이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資本主義的 方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고, 貿易管理 시스템도 國際的 관습에 기초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國際的 慣習이란, 「資本主義的 方法」을 가르치는 것으로 明言하고 있다.

둘째로, 종래의 「自立的 民族經濟」 개념 속에 다소 미약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던 輸出概念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輸入代替型에서 일종의 開發 輸出型 혹은 輸出主導型으로 전환하고 있다. 金達玄 副總理는 「우리나라에의 投資는 우리나라의 輸出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혹은 「投資를 받으면서 借金を 갚아나가는 貿易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혹은 「일본측이 우리나라의 輸出協力을 증진시키는 일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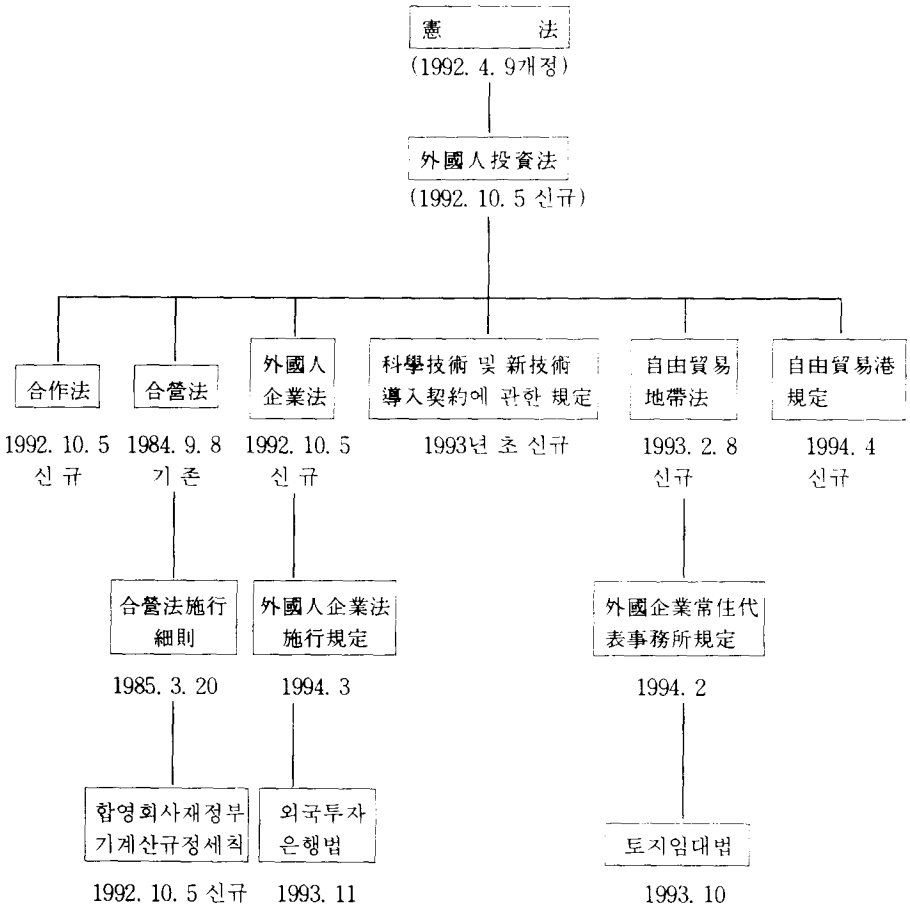
이번에 개정된 憲法에는 「國家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企業合營과 合作을 장려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을 넣고 있는데, 이 憲法 규정에 따라 1985년의 「合營法」 이외에 1992년에 새로 「合作法」과 「外國人投資法」, 「外國人企業法」을 제정하고, 다시 1993년에 「自由經濟 貿易 地帶法」을 제정 공포하고 있다. 이러한 外國人 投資關聯法은 결국은 北韓의 開發輸出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外國이 자본과 기술과 貿易 노우 하우를 갖고 와서 北韓과의 合作 혹은 단독으로 北韓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輸出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 집중적인 지역으로 羅津·先峰·清津 等地 621km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國際下請型, 委託 加工 工業化體制에 編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M 방식 혹은 輸出產業 그 자체를 輸入하여 代理輸出하는 방식이 지배적이 될 것이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經濟的 制御裝置가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 지역을 中介貿易地帶 및 加工 輸出 地帶로 開發하여 러시아의 대블라디보스톡 計劃이나 中國의 훈춘 開發計劃과 함께 豆滿江을 중심으로 한 삼각開發구도의 일환으로 동해북쪽의 제2의 홍콩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종래의 「合營法」은 해외企業과의 合營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재일 朝鮮商工人을 비롯하여 海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企業人들과 合營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외교포의 投資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在日朝鮮商工人」의 投資를 겨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朝朝合營」이

라는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에서는 모두 「共和國領域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投資할 수 있다.」고 하여 海外僑胞 이외에도 南韓企業의 投資를 허용하고 수용하려는 法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北韓의 「外國人投資法」은 外國人과 아울러 海外同胞를 포함하는 데서 다시 韓國企業이 投資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쪽으로 旋回・擴大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종래의 「朝朝合營型」에서 「朝日協力型」과 함께 「南北協力型」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經濟開放 관계의 법체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北韓經濟의 對外開放法 體系



중전의 「합營法」에 비하여 많은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어 北韓 나름대로의 對內經濟開放의 의지와 체계적이고 政策的 努力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합營法의 내용과 신규법의 내용간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散見되고 있고 外國人投資法이나 合作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의 施行細則의 정비도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규정에 의한 남북경제 거래는 국제적으로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규정 그대로 「공화국 영역 밖」도 외국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기업이 북한에 합작·합영 기업을 세우려면 17개의 서류작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영·합작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모두 「공화국 영역 밖」의 외국에 사는 동포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제간의 거래의 일환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복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북한간의 단순교역과 위탁가공무역의 상황도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1994년 초 이래 정보의 대북한 경제교류 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특히, 위탁가공반입의 급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국 경유의 무역액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밝은 전망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 남북한간의 단순교역과 위탁가공무역현황(승인기준)

(단위: 천불, %)

연도	반 입			반 출			계		
	단순교역	위탁가공	비율*	단순교역	위탁가공	비율*	단순교역	위탁가공	비율*
1988	1,037	—		—	—		1,037	—	
1989	22,235	—		69	—		22,304	—	
1990	20,354	—		4,731	—		25,085		
1991	165,996	23	0.01	26,176	13	0.04	192,172	33	0.01
1992	200,685	556	0.27	12,818	413	3.22	213,503	979	0.45
1993	188,528	4,385	2.32	10,262	3,611	35.20	198,790	7,996	4.02
1994	203,521	16,598	8.15	25,423	11,966	47.10	228,944	28,564	12.50
총계	802,356	21,562	2.65	79,479	16,003	20.10	881,835	37,572	4.26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현황』, 1995. 2.

비율*: 위탁가공의 단순교역에 대한 백분비.

北韓·中國·러시아간의 豆滿江開發戰略은 대체로 라운드로 전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라운드는 1990년경으로부터 中國의 길림성 주도로 전개되었

다. 길림성은 항구가 없는 성이고 요녕성의 大運港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따랐다. 그러므로 豆滿江 下流에서 15Km 떨어진 훈춘의 방천에 항을 만들어 北韓과 러시아로부터 豆滿江 15Km의 通行權을 얻어 동해로 진출하고자 했다. 길림성은 흑룡강성과 몽골의 지원을 받아가며 UNDP를 업고 이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2라운드는 北韓에서 中國의 豆滿江 通行權을 主權侵害事項으로 규정하면서 防川案港보다는 羅津·清津港을 확장하여 공동이용할 것을 제의하고, 아울러 羅津 先峰 621km를 自由經濟貿易地帶로 宣布하게 된다. UNDP도 北韓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자 焦點도 防川案에서 清津 羅津案으로 기울게 된다.

제3라운드는 中國측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中國은 1992년 豆滿江 下流에 中國 北韓 러시아의 領土를 리-즈하여 1000km²의 國際都市를 만들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안에는 UNDP도 支持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中國은 훈춘에서 약 70Km의 거리에 있는 러시아의 자르비노항까지 철도를 부설하기로 계약하게 된다. 자르비노항을 조차하여 中國의 철도를 부설하게 되면 中國은 자르비노항을 통하여 輸出入을 할 수 있게 되며 北韓으로서는 羅津 清津港의 독점적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北韓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다.

北韓과 러시아는 일단 國際都市案을 거부하게 된다. 北韓은 영사의 리-즈는 主體思想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며 러시아는 大블라디보스토크 構築의 실현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제4라운드는 1993년 北韓이 中國의 國際都市案을 羅津·先峰港 이용권을 결부시켜 수용하게 된다. 즉 國際都市에서는 羅津 清津港을 이용하는 조건을 붙임으로서 北韓港 중심의 國際都市가 되게끔 시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豆滿江 開發株式會社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開發을 위임하게 하자는 안이 성립하게 된다. 필요한 회사는 『동북아시아 開發銀行』을 설립하여 조달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르비노항이 개통되게 된 마당에 北韓으로서는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훈춘-자르비노간의 철도는 부설이 거의 끝나 개통단계에 이르고 있다. 中國측은 北韓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大三角을 확대하여 1,000km²를 33,000km²로 확대하고, 소삼각은 2,500km²로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國際都市案에 반대의사를 굳히지 않고 있다.

한편 北韓은 羅津·先峰을 통합하여 直轄市로 만드는 한편 종전의 621km²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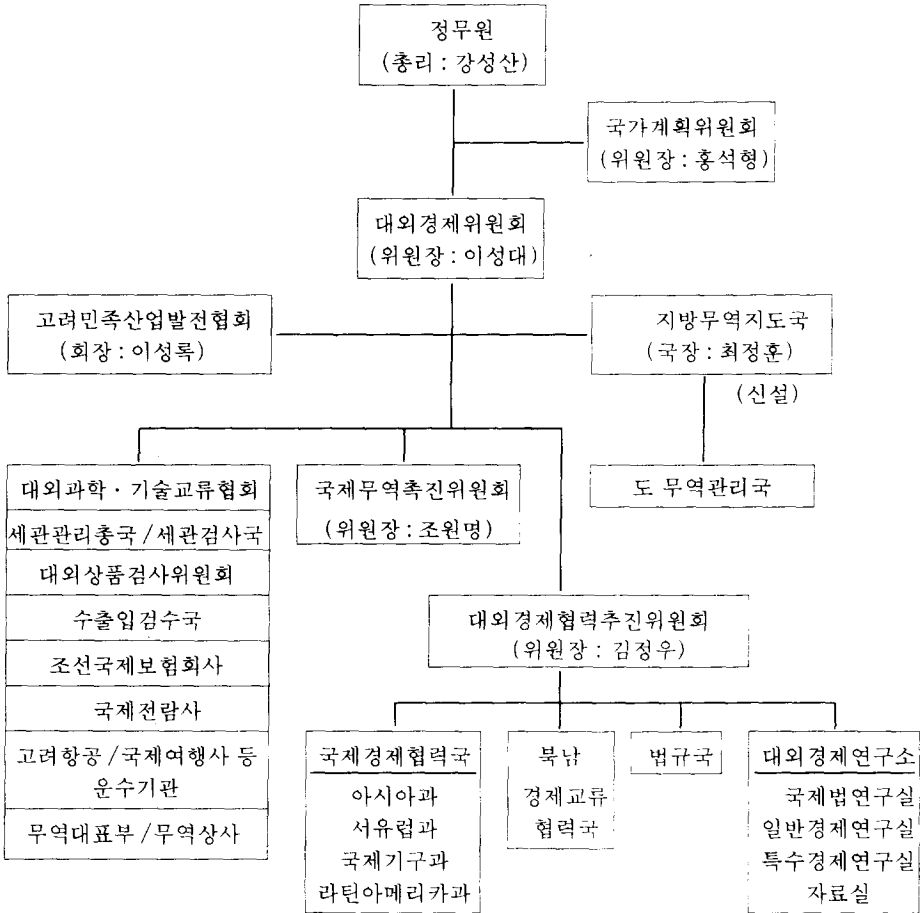
다시 원정리 일대의 125km를 추가로 編入하고 인구도 지금의 13萬여 명에서 30萬 명으로 늘릴 計劃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열악한 인프라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軍10만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공사를 벌리고 中國의 延邊과 合作으로 港灣擴張工事와 함께 호텔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리고 1993-95년의 1단계, 1996-2000년의 2단계, 2001-2010년의 3단계 長期擴張計劃을 발표하고 外國資本의 유치를 위하여 <표 5>와 같은 우대조치를 취하게 된다. 中國의 經濟特區를 의식하여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표 5> 自由經濟貿易地帶 投資優待 措置의 主要内容

比較 項目	非自由經濟 貿易地帶	自由經濟貿易地帶
1. 投資類型	合作이나 合營企業	100%外國人投資도 許可
2. 投資承認	合營:20일 이내 審議와 國家承認에 提起	合營:50일
3. 稅率	企業所得稅:25% 其他所得:20% 去來稅:규정세율	企業所得稅:14% 其他所得:10% 去來稅:규정세율의 50%
4. 租稅減免	해당사항 減免없음	製造業: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6천만원 이상 사회간접投資:4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5. 商品의 價格 決定	國際市長價格이나 國家價格 재정기관의 가격에 준거함	판매者와 購買者의 합의로 결정 (대중 필수품 가격 결정 제외)
6. 外貨管理	허용 안됨	외 화유가증권거래 허용, 외화현금, 외 화유가증권의 자유반출입 허용
7. 銀行設立	合營 銀行만 설립 가능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도 설립 가능
8. 土地賃貸	-國土管理機關이 土地賃貸 -協商方法으로 賃貸 -장려부문:10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사용료 감면, 면제	-地帶당국이 토지 임대 입찰, 경매방법도 가능 -10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사용료 감면, 면제
9. 外國人 출입	사증소지	초청장 소지자 무사증 출입

여기에서 참고로 북한의 최근의 대외경제무역관련 기구도를 보면, 다음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권화, 지방화, 다양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 북한의 대외경제·무역관련 기구도



IV. 經濟體制의 改革의 問題

北韓經濟의 對外開放政策이 對內的 體制改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經濟는 經濟 자체의 논리에 따르는 성격이 있으므로 對外的 經濟開放은 필경 對內的 體制改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中短期的으로는 對外的 開放이 體制動搖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對內的 保守體制를 오히려 強化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매우 複雜한 樣相을 보이는 것 같다.

中國은 이번의 改正憲法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改正憲法에서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依據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두 가지는 社會主義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은 비슷하지만, 중국이 「市場經濟」라고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北韓에서는 「自立的 民族經濟」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自立的 民族經濟」는 市場經濟인가 計劃經濟인가를 말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市場經濟로써도 추진할 수 있고 計劃經濟로써도 추진할 수 있는 政策의 目標이다. 따라서 中國憲法의 표현에 비하여 매우 애매하다. 中國의 경우에는 社會主義와 市場經濟가 어디까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뿐 경제는 對外的으로나 對內的으로나 市場經濟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 그 이전의 단계, 말하자면 對外的 開放과 對內的 體制間의 문제도 애매하게 남겨 놓은 채 다시 社會主義와의 矛盾의 問題라고 하는 二重의 矛盾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北韓과 中國의 차이는 開放, 改革政策의 段階的 差異라고 할 수 있다.

각계 각층의 대중이 모두 社會主義的 勞動者로 바뀌어 社會階級的 構成이 다시 單一化되어 가는 社會主義에서는 勞動者階級的 黨을 大衆的 黨으로 건설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 성격을 勞動者階級的 黨으로부터 全階層의 이익을 대표하는 大衆的인 黨으로 轉換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大衆的인 黨」이라는 개념이 改正憲法 속의 「人民民主主義」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 生産手段은 國家와 協同團體만이 所有할 수 있는 條件 속에서 「모든 階級 階層」이라는 표현의 社會階級的 性格은 대단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經濟的으로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영역에 접근하는 政治的 端緒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최근의 金正日의 논문 「社會主義는 科學이다.」에서 수령론을 金日成에게만 적용 종료시키고 수령 없는 社會主義의 길을 시사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北韓의 改正憲法 속의 「人民民主主義」를 社會經濟的으로 구체화하는 經濟體制改革 政策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自立的 民族經濟 概念 속에 각 經濟主體에 대한 中央의 集中的 經濟와 個別的 獨立性的 兩面性 그리고 政治思想的 動機와 物質的 動機의 兩面性 중에서 점차 個別獨立性과 物質的 動機를 重視하는 쪽으로 비중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北韓經濟의 對資本主義世界에의 部分的 開放에서 오는

經濟體制의 충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對內體制改革을 保留할 수도 있다는 二重構造의 性格을 주목한 바 있지만, 이러한 二重構造의 性格의 일환으로 北韓의 政治 經濟的 危機가 심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中央統制와 政治的 思想的 동기부여를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타개하려는 保守의 方法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金正日이 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통렬히 비판하고 이번 「社會主義는 科學이다」에서도 市場經濟改革 方向을 배격한 것도 그 일환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長期的으로는 個別的 獨立性和 物質的 動機를 強化하는 것 이외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길이 있기 어렵다. 따라서 中短期的으로는 保守의 方法과 改革의 方法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長期的으로는 결국 改革의 方法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北韓의 기업연합소와 그 산하기업소는 獨立採算制를 強化하여 경영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연합소와 그 산하기업소가 동시에 獨立採算制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二重獨立採算制이다. 따라서 산하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연합소의 지시에 대하여 법적 의무감을 가지면서도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과 창의 그리고 자발성을 적극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장기적 추세로써 黨 및 政務院의 直接管理環節보다 연합기업소 쪽으로 다시 연합기업소에서 산하기업체 쪽으로 책임성과 창의성의 비중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北韓의 經濟政策이 重工業에서 輕工業으로 生産財工業에서 消費財工業으로 自立經濟型에서 輸出主導型으로 그 비중이 이행하고 있는 측면도 주목할만하다. 1984년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人民生活의 획기적 향상」을 강조한 후 그 해 8월 3일 金正日是 輕工業 製品 展示場을 視察하면서 「人民의 生活向上」을 지시함으로써 이른바 8·3운동이 전개되고, 각지에 「8月 3日 人民消費生活品直賣店」이 개설되었다.

다시 1989년의 신년사에서 金日成이 「輕工業 革命」을 강조하고 그 해 6월의 제6기 제16차 黨中央委員會에서 輕工業 革命方針이 採擇되었으며, 1990년 6월의 全國輕工業大會에서 金正日是 「輕工業 革命을 철저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金正日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日用品은 種類가 적고 質도 높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모처럼의 솔직한 발언으로 주목을 끈다. 이러한 消費財 부분에 있어서는 能力別 資金制를 보급하고 계획을

초과달성하면 초과달성부분은 단위기업소에서 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농가에 있는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촌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 北韓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부분은 비교적 면적이 좁은 각 농가의 텃밭경영이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北韓 經濟政策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두고 「外國에의 從屬 내지 依存에서 的 脫却을 보장하는 自立的 民族經濟體制의 確立에서 多樣化」하는 人民의 需要에 對答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의미에서의 自立化 二元體化에의 이행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연속적 변화를 강조하는 해석이다.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정책이 결국 중국형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제적 沈滯와 그것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식에서 잉태된 것이다. 잇달은 흉년과 농정의 실패로 인한 식량생산의 부족은 식량배급량이 실제 수요량의 50~60% 이하에 머물고 있고 에너지의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공장이동율이 30~50%의 수준에 머물다보니 그 부족부분은 배급제도나 소비품 직매점이 아닌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의 비공식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농민자신의 텃밭경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집단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정유통, 공장에서의 생산원자재나 생산제품의 부정유통, 공장에서의 생산원자재나 생산제품의 부정유통, 군수품 공장에서의 부정유통, 부녀들의 가내수공업 제품을 농민시장이나 소비품직매점에 상품화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위 8·3소비품운동은 가내수공업을 장려함으로써 가내수공업 제품의 상품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연변동포나 중국상인들이 방물장사를 하거나 농민시장에 상품을 비공식적으로 공급하거나 북한의 암상인에게 상품을 넘겨준다. 연변지역의 도문, 훈춘, 삼합, 삼봉, 장백 등지를 통하여 북한에 드나드는 큰 장사꾼은 2000여 명 정도라고 한다.⁸⁾ 특히 연변동포나 중국상인들에 의하여 북한의 국경도시에 「홍콩시장」 혹은 「중국시장」을 이루어 중국제품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제국의 상품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이익마진은 최소 2배고 높을 때는 4~5배라고 한다.⁹⁾ 1989년의 평양 축전은 북한주민에게 자본주의 상품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양축전에 의한 재정

8) 中央日報, 1995년 6월 12일, 15面.

9) 上同.

과탄이 농민시장의 보급을 촉진시켰던 것이다.¹⁰⁾

〈표 6〉 북한에서의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 비교

품 목	농민시장가격	국정가격
두부(1모)	5~7원	14전
예비표	10원	무가(無價)
옥수수	5~6원(겨울철은 10~15원)	7전
입쌀(1kg)	20~60원	8전
돼지고기(1kg)	50원	7원
치약	10원	1원40전
편리화(천운동화)	50~70원	3원
비닐구두	1백50~2백원	4원50전
가죽구두	4백~6백원	
러닝셔츠	30~40원	2원80전
이발소	4~5원(호텔)	50전~1원
목욕탕	20~80전(대중탕)	50전~2원(독탕)
가스라이터	20원	1원50전
비디오테이프	3백~4백원 (88올림픽·음란물 6백원)	
녹음기	2천5백~3천원	2백60원
컬러TV	2만3천원	1천5백원
냉장고	1만5천~1만6천원	6백50원
자전거	1천5백~2천원	4백원

이러한 농민시장 및 암시장은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이미 북한당국으로 서도 금압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다. 북에서 귀순한 사람들이나 북에 장기체류한 사람들의 일치된 목격담을 종합해 보면, 북한 주민은 이미 생활의 반 이상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공산품의 80%,主食인 옥수수의 60% 정도를 이미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의 비공식시장 내지 제2경제(second economy)부분에서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귀순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종합하여 북한 주민의 생필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가격차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저 10배에서 최고 40배 정도이다.¹¹⁾

한편 함북지방의 농민시장의 가격시세는 〈표 7〉과 같다.¹²⁾

10) 徐載鎮, 『北韓住民들의 價値意識變化・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民族統一研究院, 1994.

11) 中央日報, 1995년 1월 20일 참조.

12) 中央日報, 1995년 6월 12일 참조.

〈표 7〉 함북 농민시장의 가격시세

품 목	가 격	품 목	가 격
쌀 1kg	25원 / 33~38원	말린낙지 20마리	250~320원 / 650~720원
강냉이 1kg	7원 / 15~17원		
계란 1개	7원	말린해삼 1kg	2,000원 / 4,500~5,500원
능주(동동주) 5백g	15원 (18~20%)		
백주(중국술) 5백g	40원 (40%)	말린전복 1kg	3,000원 / 8,000~10,000원
별(吉星) 1갑	20원		
양말 1켄레	15원 / 25~30원	고사리 1kg	70원 ~ 150원
여자내의 1벌	60원 / 85~90원	고비 1kg	50원 ~ 60원 / 100~120원
실내상의 1벌	220원 / 320원 ~ 340원		
바지(운동복) 1벌	170~230원	갯 1kg	15~60원
여자바지 1벌	120~180원	콩기름 5백g	40~80원
천 1m	120원 / 200~220원	흑백 TV	7,000~10,000원 (중고 4,000~7,000원)
겨울옷상의 1벌	1,200~1,800원		
말린명태 20마리	100~240원		

※ 원=북한내화(공식환율 1달러=2.15원쯤).
 / 표시는 지역·시기에 따른 차이 반영.
 담배·경공업제품은 중국産.

농민시장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상품은 농민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농민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10일에 한번 열리던 「장마당」은 5일에 한번씩으로 단축되고 최근에는 일종의 난전(亂廛)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리는 지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공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전문장사꾼 그룹으로 전 인구의 3~4% 정도라고 한다. 둘째는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상사를 하거나 부업으로 장사를 하는 그룹으로 전 인구의 4% 정도라 한다. 셋째는 핵심주민이나 간부주민으로 공식적인 출세를 지향하지만 권력형 부패로 지하경제와 연결된 그룹이다.

소련도 1980년대에 제2경제의 광범한 발달로 개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의 경우에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의 광범위한 형성으로 시장경제형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중국쪽 국경부근의 산골에는 중국형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즉 소유는 국가소유일지라도 경영은 농민 시장을 전제로 한 개인경영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라고 일치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브로텔의 지적처럼 어떠한 체제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봉건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소유는 사회주의형 소유제를 관철하면서도 경영은 시장경제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가 공식화되면 주체사상의 체제와 충돌하게 된다. 주체사상이 생활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공식 시장경제의 보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주체사상체제를 지속하는 한 비공식 부분을 공식화하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체제를 지속하려 하면 개방은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개방 그 자체가 중단되거나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 북한에 있어서 제1차 개방, 제2차 개방에 이은 지금의 제3차 개방이 제4차 개방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내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제4차 개방은 두 가지 유형이 예상된다. 하나는 지금의 제3차개방이 체제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형 개방으로 귀결되는 연속적 형태이다. 또 하나는 지금의 제3차 개방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북한 내의 주체사상과 비공식시장의 충돌이 일어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 비공식시장부분이 공식적인 부분으로 등장하는 불연속적인 형태이다.

V. 小 結

이상에서 우리는 北韓經濟의 기본원리를 살펴본 후 지금의 開放의 시도와 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市場經濟型 改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北韓經濟의 開放과 改革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北韓體制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南北經濟統合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開放과 改革의 결과로 그 후에 南北經濟統合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開放과 改革의 틀 그 자체 속에 이미 南北經濟統合의 조건을 빌트·인 시켜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경제의 改革의 틀 그 자체 속에 北과의 經濟統合의 조건을 빌트·인 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 北韓의 開放관련法에 따라 南北貿易을 할 것이 아니라 南北基本合議書를 기준으로 經濟協力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北韓의 開放이 市場經濟的 改革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北韓의 政權安保 나아가서는 體制安保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政治的 妥協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南北間의 改革的 相互依存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韓國의 民主的 社會改革이 北韓의 社會改革으로 연계되는 累積的 好循環 메커니즘의 형성이 중요하다.

동시에 南北統合의 문제는 東北亞의 多者관계의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측면을 가지면서 동시에 南北관계가 東北亞 多者관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¹²⁾ 우리가 韓國의 社會經濟的 改革 - 南北經濟統合 - 東北亞經濟協力圈의 형성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12) 拙稿,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經濟統合」, 『1994년도 學術發表大會論文集』, 韓國比較經濟學會 참조.